

요 르 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6. 10.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10
IV. 국제신인도	14
V. 종합의견	17

I. 일반개황

면적	89천 km ²	G D P	375억 달러 (2015년)
인구	7.6백만 명 (2015년)	1인당 GDP	4,936달러 (2015년)
정치체제	입헌군주제	통화단위	Jordanian Dinar (JD)
대외정책	친서방, 친아랍	환율(달러당)	0.71 (2015년 평균)

- 아라비아 반도 서북부에 위치한 요르단은 한반도의 1/2 규모의 국토와 약 7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시리아, 이라크 및 사우디아라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운송, 관광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발달하여 에너지, 식료품 등의 수입의존도가 높으며 대외경기 변동에 민감함. 2009년 이후 세계경기 침체 및 이라크, 시리아 등 주변국들의 정세 불안의 영향으로 경제가 2%대의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입헌군주국이지만 국왕에게 통치권이 있으며, 1999년 즉위한 Abdullah 2세 국왕은 군부와 대다수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계속하고 있음. 2011년 초 중동 민주화 혁명 당시 반정부 시위가 발발했을 때도 국왕의 퇴위를 요구하지는 않았으며, 정부는 평화시위를 보장하여 무력 충돌을 최소화하였음.
-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대 중동 진출의 교두보 및 이라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등 주변국들의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원조를 받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역내 정정불안 및 수출-내수의 동반 침체로 2%대 저성장 지속

- 요르단 경제는 시리아 내전,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이슬람국가(IS)의 이라크 침공 등 인접국들의 분쟁 발생과 그에 따른 대규모 난민 유입 등의 악영향으로 수출과 내수가 동반 침체한 결과 최근 수년간 2%대의 저조한 성장에 그치고 있음.
 - 2014년 IS가 이라크를 침공하여 몇몇 지역을 장악한 이후 요르단-이라크 국경이 폐쇄됨에 따라 이라크와의 국경무역이 차단되면서 매월 1만 대 이상의 중고차 수출을 포함한 對이라크 수출이 급감하는 등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받고 있음.
 - 역내 정정불안과 테러 위협 고조는 관광객 유입에 타격을 끼쳐 GDP의 약 10%를 점유하는 관광 부문의 침체를 초래하고 있으며, 시리아로부터의 대규모 난민 유입은 사회불안 고조와 난민 지원비용 증가로 이어져 요르단 경제에 대한 부담이 증대되고 있음.
- 걸프협력위원회(GCC)*의 인프라 투자자금 지원(2016년까지 총 50억 달러 규모)에도 불구하고 역내 불안으로 인해 FDI 유입이 2014년 이후 정체되고 있으며, 재정수지 적자 개선을 위한 정부의 긴축 재정정책 지속이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음.
 - * Gulf Cooperation Council :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UAE의 6개국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
- 저유가 추세 지속이 GCC 산유국들의 경기 둔화로 이어지면서 이들 국가들에 취업하고 있는 요르단인 근로자들의 본국 송금액도 감소하여 (2016년 경상이전수취 규모는 2014년 대비 25% 감소할 전망) 경상수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보조금 감축 등으로 개선 전망

- 요르단은 산업 발전이 미진하고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관계로 세수 증대에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재정수지는 만성적인 적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다만,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12년 유류보조금 폐지, 2013년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인상, 2014년 전력 보조금 추가 삭감 등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출 절감 노력의 결과 2013년 -11.5%에서 2015년 -4.1%로 현저히 개선되었음.
- 아울러 6월 28일 차량 이전세의 세율 인상, 중고차 거래에 대한 세금 감면을 축소 등 조세 인상을 발표하는 등 정부의 조세 수취 증대 노력이 더해져,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16년 말에는 -3.8%로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재정적자 보전은 GCC로부터의 무상원조와 양허성 차관, 2014년 6월 24일 발행한 10억 달러 규모의 5년 만기 유로본드(미국 정부가 보증)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다만, IMF 등으로부터의 차관 도입으로 인해 정부의 총부채(총외채+국내순부채) 규모가 증가하여 2016년 상반기 말 GDP의 93%에 달하는 (IMF 추정) 등 정부의 재정부담이 과중해지고 있음.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수입물가 안정으로 마이너스(-)를 기록 중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최근 수년간 각종 보조금의 삭감 및 폐지 등 물가 상승 요인 발생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식료품의 국제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안정에 힘입어 2013년 4.8%에서 2014년 2.9%로 낮아진 데 이어 2015년에는 -0.9%로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2016년에도 저유가 추세의 지속 등으로 인한 수입물가 안정이 지속되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에 이어 마이너스 상승률(약 -0.5%)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표 1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e	2016 ^f
경제성장률	2.7	2.8	3.1	2.4	2.8
재정수지 / GDP	-8.9	-11.5	-10.0	-4.1	-3.8
소비자물가상승률	4.5	4.8	2.9	-0.9	-0.5

자료: IMF, EIU.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부존자원이 미미하고 산업기반이 약한 수입 의존적 경제구조

- 요르단은 인광석, 가성칼리 등 일부 광물 외에 현재 생산 중인 부존자원이 거의 없음. 그러나 최근의 탐사작업 결과 약 420억 톤의 셰일오일(shale oil)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현재 채굴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 금융, 부동산, 관광, 운송 등 서비스업이 GDP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주로 섬유, 비료, 화학원료 등 원자재 산업 위주로 이루어져 그 외 생활용품과 산업용품 등은 수입에 의존함. 농업 생산량도 미미해 국내 식료품 수요량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산업별 GDP 구성(2015년): 서비스업(66.2%), 제조업(29.6%), 농업(4.2%)

나. 성장 잠재력

□ 지정학적 입지를 활용하여 역내 물류 허브 구축

- 요르단은 홍해 연안의 Aqaba 항을 기점으로 시리아, 이라크, 팔레스타인을 커버하는 서부 중동 지역의 물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중동의 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2017년 하반기 중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Aqaba 신항만 건설 프로젝트는 Aqaba 항의 일반 화물, 곡물, 로로선(RO/RO ship) 등의 선적/하적 처리능력 및 여객선 수용능력의 대폭적인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특히 12개 이상의 터미널들이 원유를 비롯한 다양한 액체류 수송을 처리할 계획임. 동 프로젝트의 일부인 LNG 터미널은 2015년 개통되어 현재 운용 중임. 아울러 곡물 처리용량은 기존의 8,000m³에서 2배인 16,000m³로 증대될 전망이다.

□ 대외개방적 경제체제와 양질의 노동력 보유

- 요르단 정부는 부존자원이 미미한 상황에서 외국인투자 유치와 대외교역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하여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등 대외개방적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30세 미만의 젊은층이 전체 인구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인근 국가들에 비해 교육수준이 양호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다. 정책성과

□ 지속적인 민영화 정책의 추진

- IMF는 비대한 공공부문과 막대한 재정적자를 요르단 경제의 취약점으로 지적해 왔음. 이에 요르단 정부는 국영기업 민영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각 부문에서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까지 국영정유회사(JOPETROL), 국영 통신공사, 칼륨개발공사, 인광개발공사, 국영 항공사, 우정국 등이 민영화되었음.
- 전력 부문의 경우 NEPCO(국영전력공사)는 현재 송전만 담당하며, 발전과 배전은 모두 민영화됨. 단, 발전기업인 중앙전력공사(CEGCO)는 요르단 정부가 49%의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음.

□ 적극적인 대외개방 및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

- 요르단 정부는 자본 및 기술의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대외개방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강조하여, 현재까지 미국, 캐나다, EU, EFTA(유럽자유무역지대), 싱가포르, 터키 등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였음.

- 요르단은 앞서 1997년 아랍연맹 회원국들로 구성된 대아랍자유무역지대(GAFTA)에도 가입하였음.

○ 또한 대미관세면제특구(QIZ: Qualified Industrial Zone) 및 Aqaba 경제특구(Aqaba Special Economic Zone), 산업개발구역, King Hussein Business Park, Irbid 개발구역 등을 조성하는 등 투자제한 완화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FDI 유입액은 2006년 사상 최대치인 32억 달러에서 2012년 15억 달러로 감소하였음. 이후 2013년 18억 달러, 2014년 20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저유가 지속에 따른 GCC 산유국들로부터의 FDI 유입 감소로 인해 2016년에는 12억 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 연도별 FDI 유입(억 달러) : 18('13) → 20('14) → 13('15) → 12('16f)

□ 에너지 수입의존도의 완화를 위해 에너지 인프라 투자와 신재생에너지 개발 추진

○ 요르단 정부는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 발전, 재생에너지 발전, 국내산 셰일오일 화력발전의 비중을 2020년까지 각각 6%, 10%, 14%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요르단의 전체 발전량에서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한 화력발전의 비중은 95%에 이르며, 발전연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전력수요의 꾸준한 증가는 (2007~20년 연평균 7.4% 증가 전망) 발전연료 수입액 증가로 이어져 국가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음.

○ 특히 원자력 발전의 경우 1,000MW급 원자력 발전소 1기(2018년 완공 목표)의 건설을 추진 중이며, 장기적으로 4기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통해 2035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60%를 원자력으로 충당할 계획임.

○ 아울러 풍력발전과 태양열 발전에 의한 전력생산량을 2020년까지 각각 1,200MW와 600MW까지 확대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Al-Harir 풍력발전소(200MW)와 Wadi Araba 풍력발전소(45MW) 및 Shams Ma'an 태양열 발전소(200MW) 프로젝트 등이 진행 중임.

- 요르단 정부는 이외에도 Aqaba LNG 터미널 건설(2015년 개통 완료), 이라크-요르단 간 송유관 건설, 세일오일 생산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에너지 공급구조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각종 보조금 폐지 등 긴축정책 추진

- 요르단은 IMF의 권고에 따라 유류 및 식료품 보조금을 폐지하고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등 비인기성 정책을 시행하며 재정적자 감축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2012년 각료 인원 감축과 독립 공공기관 예산 15% 감축 및 유류보조금 폐지, 2013년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인상 및 일부 공공기관 통폐합, 2014년 전력 보조금 추가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 그럼에도 각종 보조금은 여전히 2016년 기준 요르단 GDP의 약 7%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재정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보조금 개혁이 요구되고 있음.

□ 10개년 경제개발계획 “Jordan 2025”의 추진

- 요르단 정부는 2015년 10개년 경제개발계획인 “요르단 2025”를 발표하여 현재 추진 중임. 동 계획은 ‘원칙에 따른 운영’(rule of law), ‘기회균등’(equal opportunity), ‘재정의 지속가능성’(financial sustainability), ‘경제적 자립’(self-sufficiency)을 4대 축으로 설정하고 있음.
- 주요 세부 달성목표로는 2025년까지 최고 7%대의 경제성장 달성, 빈곤층 비율 하락(‘14년 14% → ‘25년 8%), 실업률 하락(‘25년 10% 미만 수준), 에너지 자급률 제고(‘14년 2% → ‘25년 39%), 여성의 노동참여율 향상(15% → 24%), 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 감소(‘14년 82.3% → ‘25년 47.4%)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주변 국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환경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르단 경제의 특성상 역내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이 동 계획의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 대외거래

□ 수입 의존도가 높아 만성적인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지속

- 에너지와 식료품의 과도한 대외의존은 물론 전자제품, 자동차 등 공산품에 대한 높은 수입 수요 등의 영향으로 상품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요르단은 연료 및 식료품 수요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여, 경상수지와 물가상승률이 국제유가 및 식료품 가격 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함.
- 2012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세 지속, 인광석 생산 감소, 대외원조 수취액 감소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15.2%에 이르렀으나, 이후 관광수입 회복과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연료 및 식료품의 수입가격 하락으로 동 비율이 2015년 -8.9%로 개선되었음.
- 2016년에는 연료 및 식료품의 수입가격 안정에도 불구하고 역내 정정 불안으로 인한 인접국들과의 교역 중단에 따른 수출 감소, 저유가 지속에 따른 GCC 국가들의 경기 둔화로 인한 경상이전수지 흑자 감소(이들 국가에 취업하고 있는 요르단인 해외근로자들로부터의 외화송금 감소) 등으로 인해 동 비율이 -11.1%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D.S.R, 단기외채잔액비중 등 외채관련 지표는 미흡

- 외환보유액은 FDI 유입 감소, 경상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2012년 말 전년 대비 30.0% 감소(78.7억 달러)하였으나, IMF의 대기성차관 지원 등에 힘입어 2015년 말 150.2억 달러(월평균 수입액의 7.6개월분)로 증가하였음. 다만, 2016년에는 무역수지 악화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규모 확대에 의해 135.4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D.S.R은 2012년 말 8.3%에서 총외채잔액 증가와 총수출의 감소 추세 전환(2015년) 등으로 인해 2015년 말 22.0%로 급등하였으며, 동일한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2016년 말 25%에 육박할 것으로 우려됨.

- 우방국의 양허성 차관 및 IMF의 차관 지원 등으로 총외채잔액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이 2010년 75.7%에서 2012년 128.5%로 악화되었으나, 이후 외환보유액 증가로 동 비율은 2015년 72.4%로 낮아졌음. 2016년에는 재정수지 적자 보전을 위한 대외차입 증가로 인해 동 비율이 80.8%로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IMF의 대기성차관(SBA) 및 확대신용공여(EFF) 지원 계속

- 요르단 정부는 2012년 8월 IMF로부터 지원받은 3년 간에 걸친 20억 달러의 대기성차관(SBA) 지원을 2015년 8월 다시 3년 간 연장받은 데 이어, 금년 8월 24일 IMF로부터 3년 만기 7억 2,300만 달러 규모의 확대신용공여(EFF)를 추가 지원받았음.
- IMF는 현재 요르단의 GDP 대비 공적채무 비중이 9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EFF 제공의 조건으로 동 비율을 77%까지 낮추고 사업 및 투자환경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음.

□ 미국과 대출보증협약 체결

- 요르단 정부는 2013년 8월 미국과 대출보증협약을 체결, 향후 7년 간 국채 12.5억 달러에 대해 미국 정부의 보증을 받게 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보다 용이해졌음.

< 표 2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e	2016 ^f
경 상 수 지	-4,711	-3,504	-2,608	-3,332	-4,381
경 상 수 지 / G D P	-15.2	-10.4	-7.3	-8.9	-11.1
상 품 수 지	-10,544	-11,648	-11,966	-10,210	-10,614
수 출	7,887	7,913	8,385	7,829	7,515
수 입	18,431	19,561	20,351	18,039	18,129
외 환 보 유 액	7,869	13,010	15,120	15,025	13,537
총 외 채 잔 액	18,943	23,391	25,511	27,566	29,436
총 외 채 잔 액 / G D P	61.2	69.6	71.2	73.5	74.7
D S R	8.3	11.6	15.3	22.0	24.9

자료: IMF, EIU, OECD.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Abdullah 국왕에 대한 지지와 통치는 안정적

- 요르단은 입헌군주제 국가임에도 국왕이 외교, 국방, 행정 등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음. 국왕은 군부와 정보기관 수장의 임명권을 갖고 있으며, 대법관과 상원의원까지 정부/의회의 승인 없이 임명할 수 있음.
- 중동 외교의 달인으로 불린 선친 Hussein 국왕의 서거에 따라 1999년 즉위한 Abdullah 국왕은 군부 및 대다수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부패 척결, 행정 투명성 증대, 금융제도 개선 등 개혁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
- 다만, 요르단 사회의 뿌리 깊은 인종주의(팔레스타인계 이주민에 대한 차별)와 무슬림형제단으로 대표되는 이슬람 보수주의 세력의 반대 등이 개혁 추진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9월 20일 제18대 총선 실시 : 야당인 이슬람행동전선(IAF)의 의회 복귀

-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9월 20일 실시된 제18대 총선 결과, 무슬림형제단의 정치적 기구인 이슬람행동전선(IAF)이 하원 130석 중 16석을 차지하며 10년 만에 의회로 복귀하였음. 나머지 의석은 친(親)왕실 사업가와 부족 출신 관리 등 무소속 의원들이 차지하였음.

※ 의회의 제한된 역할에 회의론 품는 유권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투표율은 37% 수준에 그쳤음.

- IAF는 1989년 하원 선거에서 약 30%의 의석을 차지하였으나 2007년 하원 선거에서는 5.4%에 그쳤으며, 1인 1투표제에 기반한 기존의 선거법이 현 정권에 유리하다고 주장하며 2010년 및 2013년의 총선에 불참하고 제도권 외의 정치활동(거리 시위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음.

- 개정된 선거법은 혈연, 지연 등에 의한 투표를 막기 위해 당적이 있는 후보만이 선거에 입후보 등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중대선거구제의 성격을 가미하였음.
- 요르단 의회는 양원제로, 상원의원(65명)은 국왕이 임명하며 하원의원(130명)은 선거에 의해 선출됨. 그러나 기존의 선거법 하에서는 하원 150석(현재 130석으로 감소) 중 108석은 친 국왕 세력인 무소속 의원(부족 대표)이 점유하고 15석은 여성에게 할당되며, 나머지 27석만이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였음.
- 금번 총선으로 선출된 130명의 하원의원 중 74명이 초선이며, 여성 의원은 전 하원보다 2명 증가한 20명(의회법에 따라 여성 의원에 할당된 15명 포함)으로 역대 최고 비율을 기록하였음. 하원 중 12석은 기독교 등 종교 소수와 후보에 할당되었음. 한편, 새 의회의 여성 상원의원은 전 상원보다 2명 증가한 10명임.
- 총선 후 9월 27일 칙령으로 의회 해산, 이어 9월 28일 공포된 또 다른 칙령에 의해 새 의회의 일반회기 개시는 헌법상에 규정된 10월 1일에서 11월 7일로 연기되었음.

□ Abdullah 국왕의 정국 주도권 장악은 계속될 전망

- IAF가 의회에 복귀하였으나 의석 비중으로 미루어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며, Abdullah 국왕의 정국 주도권 유지는 계속될 것으로 분석됨.
- 다만, IAF는 단일 정파로서는 최대 의석을 확보하여 제1야당의 역할을 할 전망이다. 따라서 다수당에 의한 정부 구성 등 기존의 정치 개혁 요구를 계속하며 요르단 정국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전면 수용될 경우, 요르단 인구의 약 60%를 차지하는 팔레스타인계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IAF 등 이슬람주의 정당이 정부를 장악하여 실리주의적 외교정책을 폐기함으로써 동 지역의 정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물가 상승 및 생활고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 빈발

- 2012년 11월 정부의 유류보조금 폐지에 따른 유가 급등(용도에 따라 14~50%)에 대한 불만으로 전국에서 시위가 발생한 이후, 생활고와 관련하여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시위가 빈발하고 있음.
- 중동 국가들에 공통된 높은 실업률(특히 청년실업률)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IMF로부터의 구제금융 수혜 조건인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보조금 축소, 공공요금 인상 등을 추진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생활고 가중으로 사회불안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 인접국들로부터의 지속적인 난민 유입으로 사회불안 가중

- 인접국들인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내전 또는 분쟁이 계속되면서 이들 국가로부터 난민들이 요르단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 등 물가가 상승하고 보건, 교육, 범죄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회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
- UN난민기구(UNHCR)의 통계에 따르면, 요르단은 현재 시리아와 이라크로부터 유입된 270만 명 이상의 난민(요르단 인구의 약 35%)을 수용하여 터키와 더불어 전 세계에서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한 국가임.
 - 2012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급증한 시리아 난민은 2016년 6월 말 기준 약 140만 명(UNHCR에 등록된 난민은 약 65만 명)으로 요르단 인구의 18%에 육박하고 있음.

□ 이슬람 극단주의 추종자의 증가에 대한 우려 고조

-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30세 이하 청년층의 실업률이 2015년 3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는 등 고질적인 실업 문제의 악화로 현실에 좌절된 청년들이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IS(이슬람국가)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슬람 극단주의자를 조롱하는 만평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이슬람 모독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독교도 작가 Nahed Hattar가 9월 25일 법정에서 출두하다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이슬람 극단주의가 퍼져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 인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개혁 성과는 미미한 수준

- 정부는 인권 보호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금자에 대한 학대와 고문, 자의적 체포와 구금, 불투명한 조사 과정, 보안 당국의 신뢰성 부족, 사법절차 관여 등 문제점이 상존함.
- 연금, 사회보장, 상속, 노동, 이혼, 여행의 자유, 시민권 등의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전통적이고 광범위한 차별이 존재하며, 특히 명예살인*의 경우 연간 20여 건이 발생하고 있음.

* 이슬람권 국가에서 집안의 여성이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실제로는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결혼 등 개인의 자유의지를 실행에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 오빠, 남편 등 가족의 남자 구성원이 해당 여성을 살해하는 악습이며, 대부분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음.

□ 토착 요르단인과 팔레스타인계 주민간의 갈등 상존

- 요르단 강 동안(East Bank)에 거주하는 토착 요르단인은 전체 인구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왕과 군부-부족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권력을 장악해 옴.
- 1948년 이후 요르단으로 유입된 팔레스타인계 주민들 및 그 2세대는 요르단 전체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난민 신분이며 정치, 경제적으로 차별받고 있어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함.
- 토착 주민과 팔레스타인계 주민간 입장 차이로 인해 정부에 대한 요구도 양극화되어 정치개혁의 방향 설정 및 진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국왕 주도의 정치 개혁 프로그램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 불만이 지속되고 있음.

- 팔레스타인계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온 IAF가 주도하는 도시 하층민의 시위는 정치 자유화, 정부기구의 대표성 강화 및 경제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반면, 토착 요르단인들은 제도적 특권 유지, 정부 지원금 확대를 요구하면서 공공 부문 현대화에 반대하는 입장임.

3. 국제관계

□ 미국과의 군사적, 경제적 교류 강화

- 미국은 요르단에 연간 6.6억 달러(경제지원 3.6억 달러, 군사지원 3억 달러)를 정기 지원하는 최대 원조국으로, 2013년 7월 시리아 난민 수용 등 지역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요르단에 3.4억 달러의 경제원조를 추가 지원, 연간 총 1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음.
- 요르단은 이라크 전쟁 이후 전통적 중립 외교노선에서 친미 노선으로 외교정책을 변경하였으며,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계 주민의 반미 감정이 전보다 더 크게 잠재적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주변 중동 국가와 원만한 관계 유지

- GCC 국가들은 요르단의 수니파 왕조를 지지하여 경제적 원조를 지속하고 있음. 다만, 2011년 이슈화되었던 요르단의 GCC 가입은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반대로 당분간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여러 차례의 리스케줄링 경험

- 요르단은 파리클럽과 1989~99년 중 5차례에 걸쳐 총 8억 달러의 채무에 대해 상환을 연기하였으며, 재정적자가 지속되자 2005년에 또다시 총 외채의 17%를 2007년까지 상환 연기한 바 있음.

- 2016년 9월 현재 OECD 회원국 ECA들에 대한 연체금액은 중장기 채무 5,620만 달러로 집계되었음.
- 2016년 9월 현재 IMF와 세계은행에 대한 연체는 없음.

□ 외채의 조기상환을 실시하는 등 긍정적인 채무상환 태도 유지

- 2007년 10월 요르단 정부는 파리클럽과 총 21억 달러의 대외 부채를 11% 할인하여 조기상환(19억 달러)하는 데 합의하여 2008년 중 상환을 완료한 바 있음.
- 동 조기상환은 요르단의 견실한 경제성장 및 양호한 외채관리 전략 등에 기인한 것으로, 2000년 이후 진행되어 온 민영화에서 발생한 수익 등으로 외채를 상환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2. 국제시장평가

□ 2013년 주요 기관의 국가신용도 평가등급 하향 조정 후 현재까지 유지

- OECD는 2016년 1월 개최된 국가위험평가 전문가회의에서 쌍둥이 적자 지속, 대내외 정치상황 불안정 등의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GCC 국가와 미국 등으로부터의 지속적인 금융지원, 보조금 감축을 통한 재정수지 개선 노력 유지 등을 평가하여 요르단의 국가신용도 등급을 전년과 동일한 5등급으로 유지함.
- Moody's도 2013년 6월 지속적인 재정수지 적자,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이 국내 정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저조한 경제성장 등을 이유로 요르단의 신용등급을 Ba2에서 B1으로 2단계 하향 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표 3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OECD	5등급 (2016. 1.)	5등급 (2015. 2.)
Moody's	B1 (2013. 6.)	Ba2 (2012. 2.)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단기 인수 가능하나 신용한도 적용
- 영국 ECGD: 전액 인수 가능
- 독일 Hermes: 단기 전액 인수 가능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1962. 7. 26 (북한과는 1974. 7. 5 수교)

□ 주요 협정: 무역협정(1972), 문화협정(1977), 경제-기술협정(1977), 항공협정(1978),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2000), 투자증진-보호협정(2004), 이종과세 회피탈세방지협정(2004), 관광협력협정(2005), 원자력협력협정(2008), 국방협력협정(2009), 무상원조기본협정(2013)

□ 우리나라와의 2015년 교역규모는 9.3억 달러로 전년 대비 57.6% 감소

- 수출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약 8.5억 달러, 수입은 기타 석유화학제품과 비금속광물을 중심으로 약 8천만 달러를 기록함.

□ 우리나라의 대 요르단 해외직접투자는 2016년 6월 말 기준 신규법인 수 24건, 총투자금액 1,935만 달러에 불과함. 그러나 전력 부문을 중심으로 주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계속되고 있음.

- 한국전력은 2013년 1월 요르단 광물에너지자원부가 발주한 발전용량 89.1MW 규모의 Fujeij 풍력발전소(총사업비 1.9억 달러) 프로젝트의 건설운영사업자(BOO 방식)로 선정되었음. 동 프로젝트는 오는 2018년 가동 개시를 목표로 진행 중임.

- 한국전력은 이미 요르단에서 Al Qatrana 복합화력발전소(발전용량 373MW)와 Amman 디젤화력발전소(발전용량 573MW)를 운영 중임.

- 2014년 3월에는 한화건설이 요르단 최초의 MW급 태양광 민자발전사업인 12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공사대금 2,400만 달러) 건설을 수주, 금년 8월 발전소 건설 및 검수를 마치고 본격 가동을 개시하였음.

- 2015년에는 남부발전-대림에너지 컨소시엄이 발전용량 49.5MW 규모의 Tafila 풍력발전 IPP 프로젝트(총사업비 1.2억 달러)를 수주하였음. 동 프로젝트는 2017년 착공될 예정이며, 2019년 가동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표 4 >

한·요르단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14	2015	2016.1~8	주요 품목
수 출	1,383	849	388	자동차 및 그 부품
수 입	78	78	36	기타석유화학제품, 비금속광물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의견

- 요르단은 만성적인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가 경제의 취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최근 수년간 시리아 내전,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이슬람국가(IS)의 이라크 침공 등 인접국들의 분쟁 발생과 그에 따른 대규모 난민 유입 등의 악영향으로 수출과 내수가 동반 침체한 결과 2%대의 저조한 경제성장애 그치고 있음.
- Abdullah 국왕은 폭넓은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점진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토착 요르단인 세력과 팔레스타인계 주민 간의 갈등으로 정치 개혁의 속도가 느리고 변화의 정도가 미진하며, 잇따른 보조금 폐지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등 정치적, 사회적 불안요소가 잠재해 있음.
- 과거 리스케줄링 경험이 있으며, 최근 IMF 등으로부터의 차관 도입 증가로 인해 총외채잔액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 우려됨. 아울러 D.S.R이 2013년 11%대에서 2016년 24%로 급등하고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율이 3년 만에 다시 80%대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선임조사역 오경일 (☎02-3779-5720)
E-mail: oki1122@koreaexim.go.kr